주간통일정세 2011-50(2011.12.05~12.1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50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김정일, 평양시내 놀이공원 시찰(12/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을 데리고 개선청년공원 유희장(놀이공원)을 찾아 관리운영 실태 등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방송이 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개선청년공원 유희장은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졌을 뿐 아니라 인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 훌륭히 전변됐다"며 "설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 인민에게 사소한 불편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 시찰에는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 김평해 당비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경옥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이 수행
- 김 위원장은 또 피겨 모범출연(시범경기)을 관람했는데, 피겨 관람에는 김정은 외에 리영호, 김기남 · 최태복 당비서, 김경희, 장성택, 김정각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 김양건 · 박도춘 · 김평해 · 태종수 · 문경덕 당비서, 우동측, 리명수, 군 대장인 김원홍 · 박재경 · 리병철 · 윤정린 · 현철해 등이 수행

北김영남, 탄자니아 향해 출발(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탄자니아를 공식 친선방문하기 위해 6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중앙방송은 이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탄자니아를 공식 친선방문하기 위해 박의춘 내각 외무상 등과 함께 평양을 떠났다"며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준 외무성 부상이 환송했다고 전함.
- 방송은 김 상임위원장이 탄자니아를 방문하는 목적과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지는 밝히지 않음.

김정일, 군인예술축전 입선 공연 관람(12/6,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35차 군무자예술축전에서 입선한 중대의 공연을 관람하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군인들이 정치사상적 ·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되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자랐다"며 성과를 치하하고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수여

- 김 위원장의 이번 공연 관람에는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 최태복 당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 · 박도춘 · 최룡해 · 김평해 · 문경덕 당 비서가 수행했으며,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명국 · 김원홍 · 박재경 · 리병철 · 윤정린 · 현철해 군 대장 등이 함께 공연을 관람

北 '대장 동지' 김정은 내년 생일도 '평일'(12/8, 연합뉴스)

- 지난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김정은(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갈수록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지만 내년 생일은 올해처럼 '평일'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는 김정은이 북한 내에서 고(故) 김일성 주석이나 김 위원장처럼 생일이 '국경일'로 지정될 정도의 반열에는 아직 오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평양출판사' 발간 '주체 101(2012)년' 달력에는 김정은의 생일(1월 8일)이 공교롭게도 일요일이어서 붉은색으로 표기했으나, 역시 일요일인 김 주석의 생일(4월 15일)은 옅은 녹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숫자를 굵게 표기,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했다고 뉴스는 전함.
- 2월 달력 상단에는 '주체 21(1942).2.1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시였다'고 표기했고, 4월 달력 상단에는 '주체1(1912).4.1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시였다'고 소개
- 특히 김 주석의 생일을 소개하면서 그의 생가 그림과 함께 붉은색 굵은 글씨로 '100돐 4.15 태양절'이라고 강조
- 김 위원장의 경우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된 뒤 이듬해인 1975년부터 생일이 휴무일(기념일)로 지정됐으며 1980년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고 나서는 1982년 40살 생일부터 공휴일로 정해짐.
- 비록 내년 달력에 김정은의 생일이 김 주석이나 김 위원장의 생일처럼 국경일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권력이 강화된 만큼 북한 내부적으로는 올해보다 더 큰 규모의 생일 축하 행사가 열릴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이 예상
-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했던 올해 그의 생일도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각급 단위별로 기념행사가 열렸고 주민들에게는 선심성 선물이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짐.

北, 英대사에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영국 주재 대사에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 8일 전함.
-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영국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현학봉이 임명됐다"고 밝힘.
- 현학봉 주영 신임대사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대표부 1등 서기관을 지내다 최근까지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을 지낸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인 미국통 중 한 명이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열린 6자회담에 참가해 공식 대변인으로 활동 및 2007년부터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 북측 수석대표로 있었음.

北김정일, 군부대 선전대 공연 관람(1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9일 보도
- 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공연 관람을 마치고 "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여러 차례 봤는데 이번 공연이 제일 잘됐다"고 평가했다고 소개
- 하지만 방송은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의 수행자 명단을 밝히지 않음.

北김정일, 함경남도 생산시설 시찰(12/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를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0일 보도
- 이 방송은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음.
- 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2·8비날론연합기업소 급수침전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분공장, 신흥산화학공장, 함흥편직공장, 흥남구두공장, 성천강수출품출하사업소, 함흥시 회상지구에 새로 건설된 채소온실 등 생산시설을 시찰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에는 김경희·주규창 노동당 부장, 리재일·박봉주 노동당 제1부부장, 곽범기 함남도 당 책임비서 등이 수행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5차 군무자예술축전 당선(제762군부대·제966군부대·제630군부대·제337군부대·제233군부대 관하) 중대 군인들 공연 관람 및「최고사령관 특별감사」전달(12/6, 중·평방·중통)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12/9, 중·평방·중통)
- 김정일, 함경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12/10, 중통·중·평방)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총리, 12.6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 了解(관계부문 일군 협의회 소집) 및 개건된 락랑감자가공공장 생산공정·감자저장고들 시찰(12/6, 중통·중방)
- 北, 12.7 최영림(내각총리) 등 참가下 제35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 진행(12/7, 중통·중방)
- 김영남, 12.8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도착 및 환영식(12/9, 중통·중방)
- 지난 7월~10월말까지 "김일성종합대학 등 평양시內 「직맹」 조직들의 매일 800명, 연 10만 명에 이르는 「직맹」 원들의 만수대지구 건설장 야간지원" 성과 및 격려(12/9, 중방)
- 김일성의 "정치사상강국 건설의 만년토대 업적은 끝없이 빛날 것"이라며 "정치사상적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앞당겨 와야 한다"고 全民 독려(12/9, 중통·민주조선)

나. 경제

"北 11월 배급량 365g으로 조금 늘어"(12/7, 미국의소리(VOA))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당국이 11월에 주민 한명 당 하루 365g의 식량을 배급해 10월(355g)보다 10g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
- 북한의 식량 배급량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200g에 머물다가 10월에 355g으로 늘어남.
- 나나 스카우 WFP 북한담당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주로 옥수수를 배급했다고 자료에서 밝혔다"며 "북한은 배급량이 늘어난 배경으로 가을 추수를 언급했다"고 설명

WFP 내년 대북지원 예산 8천만 달러(12/8,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2년 대북지원 사업의 예산을 8천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WFP의 내년 대북지원 예산은 긴급식량지원 사업비 약 3천500만 달러와 구호사업비 4천300만 달러로 나눔.
- WFP는 내년 3월까지 벌이는 긴급식량지원 사업을 통해 31만t의 곡물을 북한주민 224만 명에게 공급할 예정

北, 황금평 개발 본격화…경제특구법 제정(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북중 경제특구인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법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
-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황금평 · 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되었다"고 밝혔지만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또 중앙통신은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이 수정 보충됐다고 밝혔지만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개정됐는지는 소개하지 않음.

FAO, 北 식량부족국으로 재지정(12/9,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이달에도 북한을 식량부족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함.
- FAO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곡물 수확량이 늘었음에도 경제난과 농자재 부족으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다며 외부 지원이 필요한 33개 식량부족 국가에 북한을 또 넣음.
-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량은 도정 이전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5백50만t이라고 FAO는 밝힘.
- 북한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곡물 26만7천700t을 수입하고 5만9천500t을 지원받아 식량 부족분 108만6천t의 30% 가량인 32만7천200t을 확보
- FAO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을 단 · 중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밀,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종자와 비닐 박막을 지원해야 하고, 북한 당국은 개별 가구의 텃밭농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

北보위부 탈북자 가족 갈취 성행(1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공안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탈북자 가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
- 한국에 사는 탈북자 김모씨는 보위부가 3년 전 행방불명자로 처리된 자신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한다며 가족들을 부른 뒤 "추방되지 않으려면 컴퓨터 1대를 구해달라"고 협박했다고 방송에 밝힘.
- RFA는 또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탈북자 가족도 보위부로부터 금품 요구를 수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탈북자 한모씨의 북한 내 가족은 "보위원들이 연구실을 꾸리는 데 필요한 비닐장판을 사달라고 하고 잔칫상에 올릴 열대과일과 술을 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함.
- RFA는 보위원들이 탈북자 가족을 갈취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대우가 열악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
- 북한 당국이 최근 국가안전보위부에 대한 식량배급을 줄이고 옷감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이들이 생존투쟁에 나섰다고 탈북자들은 주장

中 단둥서 내년 6월 북 · 중 경제문화박람회(12/9, 요녕신문)

- 중국 단둥(丹東)에서 내년 6월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경제문화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조선족 매체인 요녕신문이 9일 보도
- 신문은 북한과 중국 당국자들이 최근 단둥에서 만나 내년 6월 경제와

무역, 문화, 예술, 관광 등 5개 분야의 박람회를 공동 개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함.

- 이 박람회 기간 북·중 상품전과 무역 및 투자 간담회, 중국 기업들의 북한 노동인력 고용을 논의하는 노무합작 간담회 등이 열려 양국 경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북한은 또 변경 관광 등 북한의 관광자원을 홍보,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한편 미술 작품과 공예품 전시회도 열 계획

조선신보 '황금평' 카드로 개성공단 활성화 촉구(12/9,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9일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황금평'과 '나선' 등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압박하는 듯 한 주장을 내놓음.
- 조선신보는 이날 '개성공단'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의 중소기업 등 경제계는 개성공단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예민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 보수정권"이라며 "개성공단의 자리 매김은 황금평과 나선 등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MB 정권이 들어서고 4년 동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도 개성공업지구 사업은 6·15의 산아로서 유일하게 살아남고 끊임없이 성장해왔다"고 강조
- 조선신보는 지난 9월 개성공단의 생산액이 3천682만 달러로 8월의 3천531만 달러에 이어 연속으로 최고기록을 넘어섰으며 누적 생산액은 11월 현재 14억6천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함.
- 신문은 또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이 123개로 불어났고 북측 노동자 수는 4만8천명을 넘었다고 밝힘.

"러 회사, 남쿠릴열도서 北 근로자 고용"(12/9, NHK)

- 러시아 건설회사가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공사를 하고 있다고 NHK가 9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 9명이 이날 오후 러시아 사할린주의 코르사코프 항에서 배를 타고 남쿠릴열도 4개 섬 중 한 곳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섬으로 향했으며, 사할린주 등지에서 활동하는 건설회사 '리고디자인'이 고용
- 러시아가 일본과 영토 갈등을 빚는 남쿠릴열도 4개 섬을 개발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는 당시가 처음이며, 일본은 이들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북방영토 고용은 러시아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음.

10월 북-미 교역 245만 달러…전액 구호품(12/10, 미국의소리(VOA))

- 지난 10월 북한과 미국 간 교역액이 245만 달러에 달한다고 미국의소리(VOA)소리 방송이 10일 보도
- 미국 상무부는 전날 발표한 무역 통계자료에서 10월 중 북-미 교역액이

245만 1천 달러로 집계됐다며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이라고 밝힘.

– VOA는 "상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수출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하지만 북-미 간 상업적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모두 대북 구호사업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인다"고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平南 안주시), "11월 석탄생산계획 107.3% 초과 수행" 선전(12/5, 평방)
- 平南道內 순천·북창·덕천지구들에 "2,600세대의 현대적인 탄부 살림집" 완공(12/6, 중방)
- 平安南道 평성시에 540여 세대(14동, 5·7층) 살림집 건설(12/7, 중통)

다. 사회·문화

평양 중심가에 '비엔나 커피숍' 등장(12/6,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 평양 중심가에 비엔나 커피 전문점이 등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독일의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를 인용해 6일 보도

–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는 지난달 24일 '평양의 생크림 거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10월 평양 김일성광장 옆 중앙역사박물관 안에 문을 연 '비엔나 커피숍'을 소개

– 한 오스트리아 사업가가 투자한 이 커피숍에는 11개의 탁자가 놓여 있고, 커피 추출법과 제빵교육을 받은 북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신문은 커피 한 잔 값이 2유로로 비싼 편인데도 이 커피숍을 찾는 북한 부유층이 늘고 있으며 2유로는 북한 시장 환율로 1만원이 넘으며 일반 노동자의 5개월 치 월급에 해당한다고 전함.

– 이 가게에서 일하는 북한 여종업원은 하루 평균 30~40명의 손님이 찾는다며 북한 외교관과 외국인이 주요 고객이라고 밝힘.

– 평양에는 이미 면세점은 물론 피자와 퐁듀(꼬치 음식에 치즈를 찍어먹는 스위스 음식)를 파는 식당과 스위스 초콜릿, 독일잼 등을 파는 고급 식료품 가게가 들어섰고, 돈만 있으면 원하는 외국제품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신문은 "커피숍 바로 옆 김일성광장에서는 젊은 군인과 아이들이 내년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과 집단체조를 연습 중"이라며 "영양이 부족한 이들의 모습과 비엔나커피를 즐기는 평양 부유층의 모습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전함.

"北 자연재해에 세계 9번째 취약"(12/6,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세계에서 9번째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독일의 민간연구소인 '저먼워치'를 인용해 보도
- 저먼워치는 세계 183개국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의 이상기후에 따른 사망자와 구매력, 국내총생산(GDP) 감소율 등을 비교분석한 '2012 기후위기 지표'를 최근 발표
- 저먼워치의 스벤 하멜링 선임고문은 "재난 대책이 미비하고 정치구조가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말함.

"北 탄소배출권사업, 유엔제재 위반 아니다"(1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국제사회에 판매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의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판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
- 북한 관리들은 지난달 독일 본에 있는 UNFCC 본부를 처음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은 전력난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함흥 1호 수력발전소, 금야 수력발전소 등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9개를 유엔 '청정개발체제'로 등록해 탄소배출권 획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中 연변위성TV, 北양각도호텔에 방송 서비스(12/6, 요녕신문)

- 중국 연변(延邊)위성TV가 북한 평양의 양각도 국제호텔에 방송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인터넷 요녕신문이 6일 보도
- 신문은 연변위성TV를 운영하는 연변라디오영화TV방송국이 지난달 29일 북한 측과 위성TV 방송 서비스 협약을 하고 이날부터 방송을 송출했다고 전함.
- 북한은 연변라디오영화TV방송국이 송출한 방송을 위성으로 수신한 뒤 유선망을 통해 각 객실에 방송하게 될 예정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이 묵는 객실에만 연변위성TV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으로 전해짐.

"北 올해 지적재산 국제특허 단 2건"(1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올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한 국제특허는 2건에 불과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
- WIPO는 지난 4월 북한이 신청한 국제특허는 구조물이나 공업재료로 사용되는 주철 용접봉이지만 나머지 한건은 어떤 종류인지 공개하기 이르다고 밝힘.
- 미국의 한 특허출원 전문 변호사는 북한의 특허출원 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북한이 특허권을 잘 모르거나 특허를 발명가 개인의 재산권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

北, 평양 을밀대 등 20여개 역사유적 대보수(12/8, 조선신보)

- 북한이 올해 평양 모란봉의 을밀대 등 20여 개의 역사유적을 대보수 했

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8일 보도
- 신문은 "보현사(묘향산 소재)의 수충사 비각과 개원사(평북 곽산)의 대웅전에 대한 대보수를 진행했다"고 밝힘.
- 신문은 아울러 평안남도 평성에 소재한 안국사 대웅보전과 황해북도 서흥군에 있는 속명사 료사채 등 역사유적들이 복원됐다고 전함.
- 이밖에 평양 모란봉의 을밀대, 칠성문, 현무문, 황해남도 해주시의 태봉각 등 10여 개 성문과 누각들에 새롭게 단청을 입히는 공사가 진행됐다고 소개

김정일 "외국음식도 현지음대로 표기하라"(12/11,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햄버거, 핫도그 등 외국음식을 현지에서 부르는대로 표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북 소식통은 11일 "북한에서 햄버거는 '다진소고기 겹빵'으로, 와플은 '구운빵지짐' 등으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함버거' '워흘' 등 외국에서 발음하는대로 쓰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매대를 시찰하면서 이처럼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힘.
- 북한에서는 최근 보도매체뿐만 아니라 일반 출판물에서도 중국의 지명과 인명을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는 등 현지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물의 이름을 부르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평양의 거리에서 패스트 푸드를 판매하는 간이 판매대는 현재 평양역, 천리마거리 등 6곳에 있다"며 "이러한 형태의 점포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도 김 위원장이 2009년 12월 개선청년공원 현지지도 때 직접 지시해 이뤄진 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쌀쌀해진 평양거리에 점심 무렵이면 특이한 모양의 간이매점들에 인파가 휩쓴다"며 "'개선빵집 청량음료'라는 이름을 단 매점에서 시민들은 햄버거와 와플, 호트도그(핫도그)로 외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고 소개
- 이 신문은 "거리매대는 지난 11월 초부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며 "매대는 경량벽판으로 만들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김정일 저작(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발표 20돌 기념 중앙보고회, 12.5 김기남, 양형섭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5, 중통)
- 北, 12.6 학위학직 소유자들의 '과학연구성과전시회'(12.6~11/인민대학습당) 개막(12/7, 중방)
- 김문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 부위원장), 인민적 시책에 따라 장애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및 옹호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선전(12/7,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日정부, 中에 탈북자 보호 않겠다 문서 서약"(12/8, 요미우리신문)

- 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내 일본 공관으로 탈출하는 북한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해 탈북자 보호와 관련 "중국 국내법을 존중해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공관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
- 신문은 "이는 북한을 배려하는 중국의 압력에 양보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중국에서의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단념한 것"이라고 전함.
-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 문제를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 등 재외 공관에서 받아들인 탈북자는 약 200명에 달함.
- 그러나 서약서 제출 후 탈북자가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경우 중국에서의 보호는 곤란해졌으며, 선양 총영사관은 올 3월쯤 새로운 탈북자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았지만 서약서를 의식해 거부했다고 신문은 전함.
- 이에 대해 혼마 히로시(本間浩) 호세이(法政)대학 명예교수(국제난민법)는 "공관에서 (탈북자를) 이송하는 경우 상대국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배려를 할 필요는 있지만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공관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인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안팎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함.

11개국서 '北인권 개입' 궐기대회(12/9, 연합뉴스)

- 제노사이드협약 채택 63주년이 되는 9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1개국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제노사이드협약은 옛 독일의 유태인 집단학살 등과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집단학살을 범죄로 규정한 협약으로, 공식 명칭은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며 1948년 12월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
- 8일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소속 단체 등 300여개 단체는 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이곳부터 주한 중국대사관까지 거리행진을 벌인다고 뉴스는 전함.

英정부, 北대표단과 인권·핵문제 논의(12/9, 자유아시아방송(RFA))

- 영국정부가 지난 3일부터 5일간 영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과

인권과 핵문제를 논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영국이 북한 대표단을 초청한 것은 북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도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이른바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정책의 일환이라고 방송은 전함.

캐나다 의회, '통영의 딸' 결의안 채택(12/10,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캐나다 의회 외교국제개발위원회 산하 국제인권소위원회가 8일(현지 시각) 신숙자씨 모녀 송환 결의안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쇄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고 10일 전함.
- 국제인권 소위원회는 결의안에서 유엔이 신숙자씨 모녀의 생사 확인과 이들의 송환을 북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캐나다 정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사안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
- 이 결의안을 발의한 캐나다 법무장관 출신의 어윈 코틀러 의원은 "신숙자씨 모녀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됐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조속히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함.

3. 대남정세

北 "남측 백령도 어로구역 확장은 전쟁불씨"(12/5, 연합뉴스; 통일신보)
- 북한의 해외홍보용 주간지 '통일신보'가 최근 우리 정부의 백령도 조업구역 확대 방침을 '전쟁불씨'라고 비난
- 연합뉴스가 5일 확인한 결과 통일신보는 지난 3일 '무엇을 위한 어로구역 확장놀음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날이 갈수록 정세가 첨예해지는 서해 수역에서 어로구역을 북쪽으로 확장한 것은 민간인을 동족대결의 제물로 삼아 무력충돌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불순한 기도"라고 주장
- 통일신보는 이어 "그것은 임의의 순간 기필코 전면전쟁을 불러오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평화로운 바다에서 마음 편히 고기를 잡아보려는 민간인들을 내세워 공화국의 신성한 영토를 도적고양이 마냥 야금야금 침범하려는 남조선 보수패당의 침략적, 도발적 범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힘.
-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백령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백령도 서쪽의 조업허용구역을 13㎢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정부, 유니세프 통해 65억 원 대북 지원(12/5, 연합뉴스)
- 정부가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을 통해 대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는 5일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565만

달러(약 65억 원)를 유니세프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유니세프의 지원 프로그램은 ▲영유아 · 임산부 백신 접종 ▲어린이 대상 필수의약품 키트, 즉석식품 · 영양보충식품 제공 ▲철분, 엽산보충제, 영양제 등을 제공하는 영양실조 예방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북한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등 146만여 명이 혜택을 볼 예정
- 이번 조치는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취임 이후 확대해온 대북 유연화 조치의 일환으로, 류 장관은 방미 당시인 지난달 5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유엔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통일부는 이에 따라 류 장관 방미 직후인 지난달 8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지원 재개를 승인

류우익 "개성공단, 통일과정서 중요 시범사업"(12/6, 연합뉴스)
-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6일 "개성공단 사업은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시범사업"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류 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서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통일부가 전함.
- 김 회장은 개성공단 내 공장 증축 재개와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건설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류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일부 입주기업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한편 "남북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과 여유를 갖고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

통일차관 "내년 한반도 어느 해보다 유동적"(12/6, 연합뉴스)
-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6일 "내년에는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해보다도 유동적이고 변동성이 많은 해로 예상된다"고 말함.
-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서울평양학회 주최로 열린 '2011년 하반기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총선과 대선이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도 선거 등 정치적 권력변동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한 역시 후계준비를 하는 과도기를 맞는 가운데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남북 간의 긴장을 낮추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임.
- 김 차관은 "무력도발 재발방지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원칙적 입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며 책임 있는 대화채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함.

"남북 고위급 11월 접촉…北 쌀 요구"(12/7, 아사히신문)
- 남북 고위급 인사가 지난달 관계 개선을 위해 접촉했으나 북한이 대량의 쌀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남북한의 고위 관리가 지난달 북한의 무력도발로 경색된 관계 개선을 위해 접촉했다고 전함.
- 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수십만t을 염두에 둔 대규모 쌀 지원을 요구해 남북 협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
- 신문은 북한이 남한에 요구한 쌀을 내년 4월 고(故)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 축하 행사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난으로 북한이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 부각됐다고 해석
- 신문에 의하면 한국도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북한의 지원 요구에 대해 한국은 작년에 자행된 2차례의 무력 도발을 사죄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해 고위급 접촉은 성과 없이 끝났다고 뉴스는 전함.
- 신문은 북한 매체가 11월 하순부터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2차례나 보도하는 등 최근 들어 한국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위급 협의 결렬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고 전함.

통일부 "남북접촉설 사실아냐"..日언론 보도 부인(12/7, 연합뉴스)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남북 고위급 인사가 지난달 만났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 내용 전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박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함.

민화협, 대북지원 밀가루 모니터링 방북(12/7,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7일부터 3박4일 간 방북해 황해남도 사리원시에 지원한 밀가루 분배 현황을 확인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번 모니터링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동건 회장과 강학봉 나눔사업본부장, 이운식 민화협 사무처장 등 5명이 참여할 예정
- 앞서 민화협은 지난 7월 1차분 밀가루 300t을 지원한 이후 11차례에 걸쳐 사리원시에 밀가루 2천500t을 지원하고 3차례 모니터링을 함.

개성공단 사장들 '개성총회' 참석차 방북(12/7,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7일 기업책임자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개성공단 내 기술교육센터에서 열릴 정기총회에 참석한 뒤 8일 귀환할 예정
- 기업책임자회의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는 공단의 화합을 위해 송년회를 겸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30여명의 입주업체 대표를 비롯해 현지 법인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北대남기구 이대통령 실명 비난 재개(12/8,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8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역도'라고 비난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물음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얼마 전 리명박 역도가 우리(북한)의 최고 존엄을 헐뜯는 소설을 꾸며 낸 자에게 '격려편지'라는 것까지 보내며 대결적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고 밝힘.
- 이어 "역도의 이번 추태를 통해 우리는 대세와 민심에 역행해 끝까지 대결을 추구하려는 그의 본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우리 인민은 우리의 신성한 최고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린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또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대북정책의 유연성에 비낀 흉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실명을 쓰지는 않았지만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처음으로 겨냥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

"北 유연화조치 비난, 관계개선에 도움안돼"(12/9, 연합뉴스; 민주조선)

-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9일 "북한이 대북 유연화 조치를 비난하고 대통령에 대한 실명비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유연화 조치에 대한 북측의 비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남북 간 현안 해결과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원칙의 토대 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정부는 북한의 개별적 언행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정책의 큰 흐름을 일관성 있게 견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
-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전날 "대북정책의 유연성이란 것을 들고 나온 것은 현인택의 후임자인 지금의 통일부 장관"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을 전면차단하는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 유연성을 떠드는 것은 순전히 내외여론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책"이라고 주장

北 "신숙자 가족 송환 요구는 인권모략소동"(12/9,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남한 내에서 북한에 억류된 신숙자씨에 송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존엄과 체제를 들먹이는 인권모략소동"이라고 비난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보도를 통해 "최근 괴뢰패당은 악질적인 우익보수단체들과 월남 도주자들까지 내세워 '북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이니 '인권백서'니, 그 무슨 '전시회'와 '영화제'니 하면서 남조선 각지와 해외를 돌며 반공화국 인권모략 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
- 이어 "얼마 전에는 유엔총회에서 또다시 '북인권결의안'을 조작하는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인간쓰레기의 '가족송환' 문제라는 것까지 국제무대에 들고 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감히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거

들며(들먹이며) 인권모략소동을 벌리는 것은 가소롭고 파렴치한 망동"이라고 비난

군사분계선 인접 2곳에 '성탄 등탑' 세운다(12/11, 연합뉴스)

- 정부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 2곳에 성탄트리 등탑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의 등탑은 종교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이번 2개의 등탑은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뉴스는 전함.
- 정부 고위 소식통은 11일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에 각 1개씩의 성탄트리 모양의 등탑을 세우기로 했다"면서 "등탑은 북한지역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힘.
- 소식통은 "성탄절에 즈음해 한반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염원이 북녘 땅에 전파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등탑을 세우기로 했다"고 전함.
- 한편 군당국은 성탄트리 점등식에 앞서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北 "애기봉 점등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12/11,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11일 우리 군의 애기봉 등탑 점등이 이뤄지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경고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의 등탑 점등 계획을 거론하면서 "만약 지금 북남 간 정세가 첨예한 조건에서 또다시 그런 행위가 감행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경고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애기봉 등탑은 왜 켜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보수패당이 또다시 대결적인 등탑불 켜는 놀음을 통해 우리를 자극하고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을 더욱 본격화하겠다는 속심"이라며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애기봉 등탑에서의 불켜기 놀음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기타 (대남)

- '對北정책 유연성' 관련 "南 당국이 원칙고수를 제창하는 한 북남관계 개선에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어떤 정책이든 말장난으로밖에 될 수 없다"고 再次 강조하며 '원칙고수를 전제로 한 반공화국대결 자세의 전환' 요구(12/7, 우리민족끼리)
- "남북 사이의 대결상태 해소 및 평화와 통일의 주된 장애는 南 당국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이라고 왜곡 주장하며 '서해 5개섬 일대에서의 훈련중단' 요구 및 무시할 경우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 위협 지속(12/7, 중통·노동신문·평방)
- 【「조평통」 대변인 기자회견(12.8)】 李대통령의 탈북작가(림일, 소설 김정일 출간) 격려편지를 "대결본색을 드러낸 역도의 분별없는 망동, 北의 최고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린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 실명거론' 비난(12/8, 중통·평방)
- 北「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88호'(12.9), 남측의 '북인권법' 조속제정 움직임 등 對北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反北 인권모략책동으로 얻을 것이란 남북관계의 악화밖에 없다"고 비난, 반발(12/9, 중통)
- 南 당국의 對北정책과 군사훈련실시를 "동족대결정책·북침전쟁연습"이라며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불바다' 위협 持續 환기(12/9, 중통·민주조선)
- '對北정책의 유연성' 관련 "동족대결정책의 합리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왜곡 주장 및 "북침전쟁을 추구한다면 강력히 대처, 반공화국전쟁책동에는 무자비한 불벼락으로가 대답"이라고 위협(12/10, 중통·노동신문·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데이비스 방한..'3라운드' 시동 걸리나〉(12/7)

- 숨고르기를 해온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이 꿈틀거리고 있음.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7일 방한이 계기임. 지난 10월 제네바 북미 2차 대화 이후 북한의 반응을 지켜본 한미가 다시금 '주파수' 조율에 나선 것임.
- 양국 간 조율의 향배는 현국면에서 남북-북미 간 '3라운드' 대화의 시점과 내용을 가늠해보는 일종의 풍향계로서 주목됨.
- 데이비스 대표가 한중일 순방에 나서면서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하고 4박5일이나 체류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음. 관련국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한국의 입장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분석임.
- 한미 간 조율의 핵심은 남북-북미 '3라운드'에 대한 대응전략임. 제네바 이후의 북한의 태도를 평가하고 후속대화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코드'를 찾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우선 한미의 비핵화 '사전조치' 주문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평가하는 문제가 주목됨. 북한이 공식적인 루트로 '답'을 보내는 것은 없지만 뉴욕채널을 활용한 북미 간 접촉과정에서 일정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임.
- 한미가 요구하는 비핵화 사전조치의 핵심은 '모니터드 셧다운'(Monitored Shutdown)임. 영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중단하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확인·감시하는 개념인 일종의 '감시하의 중단'임. 이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분명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음.
- 북한의 태도를 평가하는 문제는 서울과 워싱턴 간에 조심스런 조율이 필요한 대목임.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을 주문하며 공동보조를 취해온 한미 양국이지만 북한의 '진정성'을 어떤 수위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는 온도차가 있을 수 있음.
-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다음 수순인 '3라운드'를 어떤 내용과 수순으로 가져가느냐가 한미 간 조율의 중요한 포인트임.
- '3라운드'는 지난 '1,2라운드'와 기본성격이 다름. 1,2라운드가 서로를 탐색하고 입장차를 확인하는 사전정지의 수순이었다면 이제 '3라운드'는 6자회담 재개 여부를 확정짓는 본게임에 해당한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임.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을 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의 방식

과 의제를 논의하는 무대라는 게 한미 당국자들의 공통된 인식임.

- 이는 남북-북미대화를 어떤 순서로 가져갈 것 인지와도 관련이 있음. 1,2라운드는 선(先) 남북-후(後)북미대화의 패턴을 보였지만 이것이 3라운드에 그대로 적용될지 미지수임.
- 현 정세 속에서 남북대화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이에 절차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남북대화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비핵화 사전조치 확보라는 성과적 측면으로만 보면 남북을 생략하고 북미로 직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음.
- 특히 미국 측은 데이비스 대표의 방한을 통해 북한의 일정한 태도변화를 평가하며 북미대화로의 직행 가능성을 우리 측에 타진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남북-북미대화의 순서에는 개방적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남북대화의 유용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6자회담 재개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계속 살리느냐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음.
- 외교가에서도 남북 또는 북미대화의 선행 여부를 놓고는 관측이 엇갈림. 북한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차원에서 이달 중 3차 남북대화가 먼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이달 중 북미대화가 곧바로 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 다만 연내로 대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임. 미국의 연말 연초 연휴시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분석임. 이런 맥락에서 연초로 대화시기가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옴. 만일 연초에 3라운드 대화가 열린다면 내년 3월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전에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음.
-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현 국면에서 '3라운드'를 개최하는 문제는 보다 복잡한 게임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분석임. 동북아의 '정치적 빅뱅기'로 평가되는 내년의 전반적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잡느냐 하는 '큰 그림' 그리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임.
- 내년 대선을 치르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북한으로서도 내년 4월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대외관계를 유화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음.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존재하고 있는 셈임.
- 그러나 북한이 내부적 역학의 불안정으로 인해 도발카드를 이용해 '관심끌기'를 유도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 정세는 큰 틀에서 6자회담 재개를 향해 움직여나가면서도 여전히 돌발변수가 '뇌관'처럼 도사린 유동성 높은 국면이라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시각임.

中 "6자회담 재개가 관련국에 이익"(12/7)

- 미국의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음.

-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글린 데이비스 신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곧 방중한다고 소개하면서 "하루빨리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관련국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음.
- 훙 대변인은 "중국은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 접촉을 해오고 있다"며 "관련국들이 현재의 접촉 분위기를 이어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음.
- 그는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중국을 찾아와 6자회담 등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이날 한국에 도착한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일본을 거쳐 14일 중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음.
- 아울러 훙 대변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방중이 돌연 연기된 것이 중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냐는 물음에 "노다 총리의 방문 시기는 중일 쌍방이 계속 밀접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음.
- 대신 훙 대변인은 "중국은 노다 총리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일본과 함께 노력해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한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전날 해군에 전투 준비 강화를 주문한 것의 의미를 묻자 훙 대변인은 "중국은 계속해서 방어적 국방정책을 펴나가고 평화발전을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음.

데이비스 美대표 "北 진정성 확인 위해 접촉 계속"(12/8)

-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8일 "북한의 '목적의 진정성(seriousness of purpose)'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짐을 보고 있는 중이며 이를 위한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음.
- 데이비스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과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아 얘기하길 희망하지만 솔직히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음.
-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회담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음.
- 그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가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북한이 분명한 동의의사를 표명해야 남북-북미 '3라운드'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됨.
- 그는 또 '3라운드' 개최시 남북-북미대화 수순에 대해서는 직접적 답변을 피한 채 "진전을 보려면 남북 간 활발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에 (비핵화) 사전조치의 필요성에 더해 남북대화의 중요성도 계속 강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해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논의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포함한 정치적 사안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룬다는게 미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음.

-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동북아 안보에 큰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고 유엔 결의안에 따라 미사일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음.
-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데 있어 한미 동맹이 초석"이라면서 "동북아 관련국 가운데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이라고 밝혔음.
- 임 본부장은 이날 회동에 대해 "두 시간에 걸쳐 깊이 있고 유익한 협의를 했다"면서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조치를 논의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나. 중 · 북 관계

○ 北, 황금평 개발 본격화…경제특구법 제정(12/8)

- 북한이 최근 북중 경제특구인 황금평 · 위화도 경제특구법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황금평 · 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되었다"고 밝혔지만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황금평 · 위화도 특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북 · 중 공동개발 착공식 이후 지지부진했던 특구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효율적인 외자 유치 조달방안과 구체적인 세무절차 등을 담은 새로운 경제특구법 초안을 만들어 중국의 정 · 관계, 경제계 인사에게 법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음.
- 특히 이 법안은 주요내용은 선전(深천〈土+川〉) 등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둔 법들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전해졌음.
- 또 중앙통신은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이 수정 보충됐다고 밝혔지만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개정됐는지는 소개하지 않았음.
- 앞서 지난 9월 다이위린 단둥시 당서기는 북한과 중국의 황금평 및 나선지구 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올해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음.
- 북중 양측은 지난 6월 황금평과 나선지구를 공동 관리하는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를 구성해 착공식을 했음.

다. 기 타

○ WFP 내년 대북지원 예산 8천만 달러(12/8)

-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2년 대북지원 사업의 예

산을 8천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음.

- WFP의 내년 대북지원 예산은 긴급식량지원 사업비 약 3천500만 달러와 구호사업비 4천300만 달러로 나뉨.
- WFP는 내년 3월까지 벌이는 긴급식량지원 사업을 통해 31만t의 곡물을 북한주민 224만 명에게 공급할 예정임.

11개국서 '北인권 개입' 궐기대회(12/8)

- 제노사이드협약 채택 63주년이 되는 9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1개국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림.
- 제노사이드협약은 옛 독일의 유태인 집단학살 등과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집단학살을 범죄로 규정한 협약으로, 공식 명칭은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며 1948년 12월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음.
- 8일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소속 단체 등 300여개 단체는 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이곳부터 주한 중국대사관까지 거리행진을 벌임. 대회는 같은 날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독일 베를린, 케냐 나이로비 등 세계 10개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열림.
-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는 북한도 가입한 제노사이드협약과 세계인권선언(12 · 10) 63주년을 맞아 열리는 것"이라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되는 공개총살과 반인륜적 범죄와 같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자는 의미"라고 말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 · 미 관계

미첼 美특사 방한..對미얀마 정책 협조 요청(12/7)

- 데릭 미첼 미국 미얀마 특사가 7일 밤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함. 미첼 특사의 이번 방한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의 미얀마 방문 결과를 우리 정부에 사후 설명(디브리핑)하고 미국의 대(對)미얀마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임.
- 그는 8일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박해윤 남아시아태평양 국장 등을 잇달아 만나 클린턴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관계 개선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음.
- 그는 또 무기 거래 등을 둘러싼 미얀마와 북한 간의 위법적 관계 청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됨. 미첼 특사는 미 국방부의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해 북한 동향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미국은 미얀마의 정치·경제 개혁을 촉구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보건·환경 분야 지원 프로젝트인 '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에 미얀마를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고 미얀마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임무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은 또 클린턴 장관과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간의 면담에서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 단절을 포함한 각종 요구 사항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세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 외교부 당국자는 "미첼 특사가 미얀마 개혁을 촉구하는 데 한국 정부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 들어봐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입장을 청취한 뒤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음.

4차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종료..입장차 계속(12/8)

-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4차 개정 협상이 추가 조율의 과제를 남긴 채 8일 종료됐음.
- 박노벽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전담대사와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각각 마련한 초안을 놓고 세부문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음.
- 협상장에서는 ▲원자력 기술개발 문제 ▲산학협력 ▲안전조치 ▲수출원활화 등의 분야 가운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이 2016년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제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재처리로 인한 핵무기 제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음.
- 양측은 또 '건식처리(파이로 프로세싱)'을 포함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해 양국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협정문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조율했음.
- 건식처리는 우리 정부가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 차원에서 연구해온 기술로 전해졌음.
-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문을 새로 쓰기 위한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이해·인식의 토대 위에 기술적인 조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음.
- 한미는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5차 개정 협상을 할 예정임.

나. 한 · 중 관계

中 "한국 법집행에 中어선 폭력저항 안돼"(12/5)

- 중국 정부 당국자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법 집행에 중국 선원이 폭력으로 저항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음.
- 뤄자오훠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은 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 · 중 아주국장 회의'에서 조세영 외교통상부 동북아 국장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외교부가 5일 전했음.
- 중국이 불법 조업 어선에 탄 중국 선원의 폭력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음. 뤄 국장은 또 "중국은 어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한국 정부에 "법 집행 과정에서 중국 어민의 합법적인 권익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밝혔음.
- 조 국장은 "불법 조업 문제는 자칫 외교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업당국간 협의 외에 외교당국간 협의도 강화하자"고 제안했음. 그는 또 중국 내 탈북자와 관련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음.
- 이번 한중 아주국장 회의는 2009년 9월 이후 2년 만에 열렸으며 양국은 앞으로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아주국장 회의를 열기로 했음. 또 연내에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 방안도 추진을 검토키로 했음.

다. 한 · 일 관계

도서 1천200책, 日 왕궁서 해방 귀국길(12/6)

-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우리의 귀중한 도서 1천200책이 갇혀 있던 일본 왕궁에서 해방돼 90년 만에 귀국길에 올랐음.
-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6시50분께 도서가 보관된 궁내청 서고에서 포장된 우리 도서 1천200책을 차량에 실어 도쿄 인근 나리타 공항으로 수송했음.
- 일본 정부는 통관 수속을 거친 뒤 이날 오후 나리타 공항에서 도서를 대한항공 두 편에 600책씩 나눠 실어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며, 오후 3시35분과 4시35분께 각각 인천공항에 도착함.
- 이들 도서는 대한항공에 실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우리 정부(문화재청)가 직접 소유권을 행사하게 됨. 도서가 일본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강탈해 1922년 5월 일본으로 옮긴 지 약 90년 만임.
- 도서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외교통상부 박석환 제1차관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인수인계를 확인하는 구상서를 교환하는 절차를 거침.
- 이렇게 되면 조선왕실의궤 등 일본강점기 때 강제 반출된 우리 도서는 작년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지 1년 4개월 만에 반환 절차가 종료됨.

- 이날 반환되는 도서는 지난 10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방한시 돌려준 3종 5책을 제외한 147종 1천200책임. 그동안 궁내청 소장 우리 도서는 ▲조선왕실의궤 81종 167책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반출 도서 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 1책임.
- 이번에 일본이 반환한 도서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에 옮겨져 보관, 전시될 예정임.

외교부 '日 위안부 양자협의 거부' 대책논의(12/6)

- 우리 정부의 두 차례 요구에도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양자 협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6일 자체 회의를 열어 중재위 구성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음.
- 외교부 내 '한일 청구권 협정 태스크포스(TF)'와 TF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일청구권 협정 3조(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에 따른 중재위 구성 제안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음.
- 그는 "중재위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이 함께 나왔다"면서 "중재위로 갈 경우 행정절차나 중재위원 선임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도 있었다"고 말했음.
- 외교부 안팎에는 중재위 구성 제안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제안 시기는 이번 달보다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음.
-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8월 판결 이후 외교부는 이에 대한 양자 협의를 일본에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안했고, 부내에 TF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한일 '위안부 평화비' 설치 외교마찰 조짐(12/9)

- 한 · 일 양국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 설치를 둘러싸고 외교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정대협이 오는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의 형상을 띤 위안부 평화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설치 중단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고 이에 우리 정부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민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 설치를 중단시켜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음.
- 후지무라 장관은 평화비 설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석의 설치가 일한(한일) 외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음.

- 이에 앞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달 25일 박석환 외교부 1차관을 만나 "한국 정부가 나서 평화비를 세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촉구했음.
- 일본 외무성은 특히 우리 정부에 일본 대사관 앞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평화비를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9일 "일본 측의 입장을 경청하겠지만 정부가 나서기가 쉽지 않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국적 견지에서 결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빈 협약 22조2항에 보면 외교시설의 안전과 품위 유지에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난처한 부분이 있지만 사안의 본질을 보면 일본의 요청이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면서 "일본이 피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진다는 자세를 취했으면 이 같은 평화비 건립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우리 정부는 이번 평화비 설치가 기본적으로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일인데다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책임이 일본 측에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임.
- 정부는 지난 9월15일 위안부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 양국간 외교협상을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 정대협은 지난 7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999회 수요시위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14일 1천 번째 수요시위를 계기로 평화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음.

라. 한 · 러 관계

◎ 한 · 러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추진(12/7)

- 우리나라와 러시아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동해안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해양 환경오염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추진됨.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6차 한 · 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해양 환경오염 모니터링, 동해 지진해일 모니터링을 신규 협력사업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음.
- 해양 환경오염 모니터링은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붕괴로 우려되는 동해와 오호츠크해의 해양생태계 오염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초점이 맞춰짐. 동해 지진해일 모니터링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을 우리나라 연안에 도달하기 전 관측할 수 있도록 러시아 수역에 부위 설치 등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임.
-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러시아 정정이 불안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의견을 꾸준히 개진

해 러시아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음.
- 공동위원회에서는 또 2012년 6월 개최 예정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유엔기후변화회의,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등 동북아 지역과 국제 환경협력을 논의함.

마. 미 · 중 관계

中, 美의 이란 원유 금수조치에 거부감(12/6)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6일 미국이 최근 국제사회에 이란산 석유 구매 중단을 요청한 데 대해 "(미국) 국내법이 국제법 위에 올라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거부감을 표시했음.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툭하면 일방적인 제재를 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음.
- 그는 그러나 "해당 문제로 미국이 중국과 접촉한 적이 없다"며 "중국은 이란과도 투명하고 정상적인 상업 거래를 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사회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중국이 의심받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음.
- 홍 대변인은 아울러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현재 정세를 완화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시리아의 각 측이 하루빨리 포용적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 시리아 국민의 합리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이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이달 중국 방문과 관련,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평가했음.
- 그는 또 오는 19일 워싱턴에서의 미국 · 일본 · 인도 3국 간 첫 해상안전 강화 정기대화에 대해 "해당 3국 모두 영향력 있는 국가인 만큼 지역 평화, 안정, 발전에 유리한 일을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음.

中시진핑 "경제문제 정치화 경향 줄여야"(12/7)

- 국가부주석이 미국에 "경제 문제의 정치화 경향을 줄이도록" 촉구했음. 중국 정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시진핑 부주석이 전날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음.
- 성명에 따르면 시 부주석은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대미 투자를 원하는 중국 기업들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음.
- 그는 또 중국이 미국과의 대화와 상호 신뢰,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우려를 존중하며 민감한 사안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에 대해 폴슨 전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협력 강화를 통해서만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 번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음.

美·中, 차관급 국방회담서 팽팽한 대립(12/8)

- 미국과 중국이 차관급 국방회담을 실시했으나 대만 무기판매 이슈로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음.
- 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미국 측에서 미첼 플루노이 국방차관을, 중국 측에서 마샤오톈(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회담이 열렸음.
- 앞서 지난 9월 미국이 대만에 145대의 전투기를 포함해 58억5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판매 계획을 공식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이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온 탓에 이번 회담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싸늘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측은 특히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가 부당하다며 맹공을 가했음. 마 부참모장은 "인민해방군과 미군 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장애물이 제거돼야 한다"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미군의 항공기와 군함의 근접 정찰이 바로 그 장애"라고 지적했음.
- 중국 군사과학원 뤄위안(羅援) 소장은 "대만에의 무기판매 문제는 피해가기 어려운 이슈"라고 강조했음.
- 미국 측도 이에 대해 자국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
- 플루노이 차관은 회담 시작에 앞서 "솔직하게 서로 차이를 얘기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 대만 무기판매에 대한 미국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를 비쳤음.
- 미중 차관급 국방회담은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위기관리와 오해로 말미암은 갈등을 피하자는 차원에서 합의해 처음 시작됐으며 이번이 12번째임.
- 신화통신은 지난해 1월 30일 미국이 대만에 64억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 계획을 밝히면서 미중 군사 접촉이 1년여 중단됐다가 올 초 복원됐지만, 여전히 순조롭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음.

바. 미·러 관계

〈러-美 러' 총선 부정 둘러싸고 날선 공방〉(12/9)

- 러시아와 미국이 지난 4일 러시아 총선 부정 문제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고 있음.
- 먼저 포문을 연 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쪽이었음. 클린턴은 앞서 6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러시아 총선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음.
-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OSCE가 러시아에 파견한 선거 감시단의 보고를 받기도 전에 러시아 총선이 정직하지

않고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며 공격했음. 푸틴은 클린턴이 그러한 신호를 (러시아 내) 야권에 줘 이들이 저항 시위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음.

- 이에 클린턴은 8일 브뤼셀에서 열린 러시아-나토 평의회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권리와 희망을 지지한다"며 "인권 보호는 미국 대외 전략의 일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총선에 대한 본인의 발언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음.
- 클린턴의 발언에 대해 다시 러시아 측도 집중 포화를 날렸음.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클린턴 국무장관은 자기 나라의 선거나 신경쓰라"고 충고했고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콘스탄틴 코사체프는 "그러한 발언은 러시아와 미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사. 중·일 관계

〈中·日 관계에 이상기류 형성되나〉(12/7)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연내 중국방문 일정 확정이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일본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중일 양국 간에 이상기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단순한 실무적 차원의 일정 합의 지연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음.
- 7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실무차원에서 수개월여 노다 총리의 방중 일정을 협의해온 중일 양국이 오는 12~13일 방문 확정을 눈앞에 뒀다가 막판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음.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3일 하루 일정으로 방중해 노다 총리의 방중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음.
- 주목되는 대목은 일본 언론 매체들이 노다 총리가 방중을 취소했다고 전한 반면 중국 매체들은 그와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교도통신은 일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12~13일이 아닌 다른 날로 일정을 조정하자고 요구한 탓에 일본 측이 노다 총리의 방중을 취소했다고 전했음.
- 일본 NHK방송은 오는 13일이 중국 민간인 30만 명 이상을 무차별 살해한 일본군의 만행이 저질러진 '난징(南京)대학살'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이를 꺼리는 바람에 노다 총리의 이번 방중 논의가 무산됐다고 전했음.
-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재직 시절에는 하토야마 총리가 난징기념관을 일부러 방문했을 정도로 난징 대학살 문제가 중일 간에 외교적인 장애가 되지 않아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임.
- 아울러 중일 양국 실무자 간에 그동안 수개월여 노다 총리의 방중이 논의돼 왔다는 점에서 난징기념일 문제 역시 이미 걸러졌을 것이라는 분석임.

- 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중국 또는 일본에서 '특별한' 사정이 돌출하는 바람에 노다 총리의 방중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일단 중국 정부는 노다 총리의 연내 방중이 취소된 게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음. 12~13일 방중은 하나의 안(案)으로서 논의됐던 것일 뿐이지 확정됐던 것은 아닌 만큼 추가 협의를 거쳐 노다 총리의 연내 방중을 희망한다는 얘기임.
- 사실 중국은 미국이 최근 하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발리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아태의 지도자'로서 복귀를 선언하고 남중국해를 축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주변국과의 '화해 외교'에 주력해왔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여왔음.
- 미국은 근래 들어 호주에 미군기지 건설 계획을 밝히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에 최첨단 전투기 판매를 결정했고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인도와 일본을 초청한 첫 3국 해상안보 강화 정기대화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임.
- 중국은 무엇보다 자국을 배제한 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을 추진하는데 위협을 느끼는 기색임.
- 중국에 일본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임.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달 23일 겐바 일본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동아시아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했음.
- 노다 총리의 이번 방중도 중국이 여러 차례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노다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이뤄질 중일 정상회담 의제 논의 과정에서 견해차가 뚜렷해 일정 확정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음.
- 중일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인 지난해 9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해상 충돌 등을 방지할 위기관리 체제 구성과 동중국해 가스전 협상 재개를 두고 이견이 조정되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임.
- 아울러 중국 또는 일본이 내부 정치적인 사정 탓에 '고의로' 일정 변경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음.

"日정부, 中에 탈북자 보호 않겠다 문서 서약"(12/8)

- 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내 일본 공관으로 탈출하는 북한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해 탈북자 보호와 관련 "중국 국내법을 존중해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공관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했음.
- 신문은 "이는 북한을 배려하는 중국의 압력에 양보한 것으로 일본 정부

가 중국에서의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단념한 것"이라고 전했음.

- 일본이 서약서를 제출한 때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일본 영사관에서 2008~2009년에 걸쳐 보호되고 있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교섭하던 중이었음.
-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越境者)'로 규정한 중국이 이들의 출국을 인정하지 않아 일본 공관내 체재가 2년~2년 8개월로 장기화하자 일본 측은 사태 타개를 위해 작년 말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아야한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유의하겠다"고 구두로 답했음.
- 하지만 중국 공안당국이 그 정도로는 안된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까지 탈북자가 일본에 갈 수 있도록 인정한 중국 측의 대응을 평가한다. 향후 공관 밖으로부터 공관안으로 탈북자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압력을 가했음.
-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의 요청을 문서화했고, 선양 영사관에서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5명은 중국의 묵인으로 지난 5월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었음.
-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 문제를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 등 재외 공관에서 받아들인 탈북자는 약 200명에 달함.
- 그러나 서약서 제출 후 탈북자가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경우 중국에서의 보호는 곤란해졌음. 선양 총영사관은 올 3월쯤 새로운 탈북자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았지만 서약서를 의식해 거부했음.
- 이에 대해 혼마 히로시(本間浩) 호세이(法政)대학 명예교수(국제난민법)는 "공관에서 (탈북자를) 이송하는 경우 상대국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배려를 할 필요는 있지만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공관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인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안팎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음.

아. 중 · 러 관계

○ 러, 中에 함재기 이착륙장치 판매 거절"(12/6)

- 러시아가 중국의 항공모함 함재기 이착륙 장치 판매 요구를 거절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의 신화망이 6일 보도했음.
- 신화망은 이날 인터넷 포털인 '21CN'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음. 신화망은 그러나 어떤 이유로 판매를 거절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음.
- 이와 관련해 군사잡지인 '칸와아주방무(漢和亞洲防務)'는 12월호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프롤레타르스크 공장에서 생산한 착륙제동장치 4세트를 사들이려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함재기 이착륙 장치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장치로 미국과 러시아만이 관련 기술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은 지난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바랴그(Varyag)호를 사들여 개조

한 항모를 지난 8월 10일에 이어 지난달 29일 두 번째 출항시켰으나 여기에는 제대로 된 함재기 이착륙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 바랴그호는 매각될 당시 엔진, 전기장치, 무기 등은 물론 선체에 항공기 착륙제동장치도 제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은 중국이 젠(殲)-15 전투기를 첫 항모의 주력기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는 젠-15가 자국의 수호이(SU)-33을 모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항모 함재기 이착륙 장치 판매 거절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中 "러시아 총선 결과 긍정 평가"(12/9)

- 중국이 갖은 부정 의혹으로 얼룩진 러시아 총선 결과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9일 러시아 총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700명가량의 국제 감시원이 이번 총선 진행 과정을 감시한 것으로 안다"며 "총선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음.
- 훙 대변인은 "중국은 이번 총선 결과가 러시아 인민의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은 러시아 인민의 선택 결과를 존중하고 러시아가 자기 나라 사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음.

자. 중 · 러 관계

한 · 중 · 일 FTA 논의 본격화(12/8)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3국 간 무역국경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됨.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 · 중 · 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마지막 무대인 제7차 회의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평창에서 열려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음.
- 최종보고서에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향후 행동계획 등이 담김. 작년 5월부터 시작된 3국 산관학 공동연구가 이번에 마무리되면 각국은 협상 개시 일정을 정하고 상품 · 서비스 · 투자 등 전 분야의 시장개방 범위와 수준을 논의하게 됨.
- 통상교섭본부는 "농산물 등 민감성 부분의 논의는 협상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상품분야는 진전이 있지만 투자파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이번 마지막 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음.
-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의 아시아지역경제통합체 역할을 할 이번 FTA의 주도권을 놓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임. 이는 추후 본 협상에서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제7차 회의는 3국의 고위급(차관/차관보급) 수석대표와 산관학 대

표 100여명이 참석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